

정보통신위원회

2004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정보통신위원회(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ICCP), 정보보호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PISP) 및 스팸대응팀(Task Force on Spam) 회의가 개최되어 (i) ICCP의 2005~06년도 사업예산, (ii) ICCP 산하 작업반의 구조조정, (iii) ICT 발전추세 및 정책동향, (iv) 정보보호 및 전자인증, (v) 스팸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영하지 않고 CPF(Central Priority Fund)에서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스팸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ICCP 차원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 배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CPF에서 추가로 재원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편 OECD 예산위원회는 CPF에서 2005~06년 동안 17만 유로의 재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 주요 논의내용

가. 2005~06년도 사업예산(PWB,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사무국은 2005~06년도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예산을 크게 (i)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안전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ii) 스팸대응, (iii) 통신 관련 이슈, (iv) 디지털 콘텐츠 및 전자전달, (v) ICT 발전추세 및 정책 프레임워크, (vi) 디지털경제에서 소비자 신뢰의 제고 등 6개 분야로 대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결과물(output results) 중심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설명하였다.

동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호주, 영국 등은 스팸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정규예산에 반

나. ICCP 산하 작업반의 구조조정

정보통신위원장(H.Parr, 노르웨이)은 ICCP 산하 4개의 작업반(정보경제작업반(WPIE),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WPTISP),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정보보호작업반(WPISP))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보경제작업반을 ICCP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OECD내에서 ICT 관련 사업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고, 특히 정보경제작업반은 디지털콘텐츠 및 전자전달, ICT와 경제성장의 이슈 분석 등 많은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이 이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의장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상 효율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제별로 Ad hoc그룹을 활성화하여 소그룹의 전문가 활동을 강화하고, 의장단이 회의의제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개최하여 전략적 이슈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ICCP회의 때마다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전략적 이슈에 대해 포럼을 개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문서 공개(declassification) 등 일반적인 사안은 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면회의(face-to-face)의 시간을 절약해나가기로 하였다.

다. ICT 발전추세 및 관련 정책동향

정보통신위원회는 금번 회의의 주요 이슈로 ‘미래의 ICT 기술 및 시장발전추세’를 선정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산업계의 견해 및 회원국의 관련 정책동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동 포럼에서 산업계는 미래에는 하나의 기구(single device)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무선이 중심이 되고, 정액요금(flat fee)부과추세로 나가며,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ICT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캐나다는 자국내 전자상거래가 매우 성공적이며 ICT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표하였으며, 유럽국가도 정책의 중심이 ICT에의 접근성 중심에서 활용 확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IT 839 정책(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한국의 ICT 비전

과 정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차기 포럼 주제의 예시로 브로드밴드, VoIP(인터넷전화), Biz-process(공공부문), NGN(차세대네트워크), Convergence(방통신융합) 등이 제기되었으며 추후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나가기로 하였다.

라. ITU 및 비회원국 등과 협력사업

UN ITU는 제2차 정보사회정상회담(W SIS)을 2005년에 Tunis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인터넷관리(Internet Governance)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관련 작업반(WGIG)을 구성·운영하여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U는 OECD가 동 작업반에 옵서버자격(observership)으로 참여하여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보통신위원회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WGIG에 옵서버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OECD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기초 논의자료를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회원국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에스토니아가 ICCP에 옵서버자격(observership)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OECD 사무국은 비회원국에 대한 옵서버자격 부여문제는 이사회(Council)가 결정할 사안으로 다른 위원회의 옵서버국가 초청 관련 사안과 함께 추후에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정보통신위원회는 우선 위원회 차원에서

에스토니아를 차기 정보통신위원회에 초대하기로 하였다.

마. 정보보호 및 전자인증

각 회원국의 정보보호문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questionnaire) 작성과 관련하여 2002년도에 개정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가이드라인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하고 질문형식도 예, 아니오의 폐쇄형 설문지에 비해 자유롭게 의견을 서술하여 각 회원국의 활동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지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설문지 조사항목에 정보보호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이 정보보호예산 범위가 각국마다 다를 경우 비교에 어려움이 있고, 보안상 자료공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견을 제기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9.11테러 이후 전문가그룹(OECD-ICAO 공동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여행의 안전제고와 관련하여 여권에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하고, 국가간 분실여권 및 출입국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논의가 소개되었으며,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은 2005년부터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장문의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개인 정보보호 게시문을 간소화하여(다계층 주의문, Multi-Layered Notice) 이용자들이 쉽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전자인증 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마련과 관련하여 향후 3주간 회원국의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내 전자인증체계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스페인 등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전자인증 정책, 기술 등에 대한 상세자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바. 스팸대응방안

지난 2004년 7월에 구성된 스팸대응팀(Spam Task Force)이 9월 22일 첫 대면회의를 가졌다. 동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스팸대응팀(Task Force)의 구성 배경 및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스팸대응책(Anti-Spam Toolkit) 마련 등 과제의 추진에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스팸대응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한 종합 가이드라인 성격의 Anti-Spam Toolkit 개발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및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11월 10일까지 전자토론 등을 통해 회원국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Toolkit 개발계획을 보완해나가기로 하였다.

OECD 사무국은 2004년 3/4분기 중 실시한 회원국별 스팸규제 현황 조사에 대해 현재까지 총 27개 회원국 및 2개 비회원국(키프로스, 페루)으로부터 답변을 수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 종합 보고서, (2) 회원국별 스팸규제 법 집행 사례집, (3) 회원국별 스팸규제 기관 안내서를 마련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여

러 회원국은 동 조사 결과가 국제협력 추진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사무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하였다.

Anti-Spam Toolkit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는 스팸 측정(Metrics)과 관련 하여 스팸 측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스팸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및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ITU, APEC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하였다.

2. 관찰 및 평가

ICCP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면회의 외에 소규모 전문가회의 등 Ad hoc그룹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한 만큼 우리나라의 ICT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 측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지식 및 우수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요청된다. 특히 ICCP의 정기회의에서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전략적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므로 우리 측이 관심이 있고 회원국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OECD

사무국과 협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2차 정보사회정상회담(2005년, Tunis)의 주요 의제로 인터넷관리(Internet Governance)가 선정되어 향후 UN ITU 및 OECD 등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보호문화수준 측정을 위한 설문지에 정보보호예산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일부 회원국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무국 및 회원국과 추가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국제여행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이 2005년부터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전자여권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되는 만큼 이에 적극 대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팸대응책 마련을 위해 우리가 그동안 OECD 스팸워크숍 개최(2004년 9월 8~9일, 부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향후에도 스팸대응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OECD 차원의 종합적인 스팸대응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석균 주OECD대표부 1등 서기관

skchung03@mofat.go.kr】